

---

#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 —

선거연수원



# Contents

I.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	1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1
2. 중요성 .....	1
3. 기본원칙 .....	3
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	4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4
2.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	5
III.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	6
1. 미국 .....	6
2. 영국 .....	6
3. 프랑스 .....	7
4. 독일 .....	8
5. 일본 .....	9
IV.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10
1. 개관 .....	10
2. 민주시민교육 현황 .....	12
3. 향후 과제 .....	16





#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I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 1. 민주시민교육<sup>1)</sup>의 개념

국민<sup>2)</sup>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을 말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중요성<sup>3)</sup>

#### 가.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기능임.
-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여 공동체의 의사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하는 것임.

1) 미국·영국·프랑스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 독일은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일본은 '공민교육(公民教育)'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용어가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즉 정치체제와 관련된 관치교육으로 잘못 이해되었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인권, 준법, 환경, 통일 등 그 시행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 주권의식 함양과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사무의 범위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설정함.

2)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고, '시민'은 글자 그대로 도시의 구성원을 말하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자였고,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즉 국가의 주권자를 말함. 오늘날 '시민'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국민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시민과 국민을 크게 대별하지 않고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음.

3) 2009년 웰드리서치가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출직공무원 및 정당관계자'의 84.6%, '학계·언론계·시민단체'의 74.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나.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 학습

-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를 때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며, 소수의견의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에 대한 체계적 학습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습득시키는 것임.

## 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통하여 공동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담당하는 정당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라.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역량있는 시민 양성

- 민주시민이란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실천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 살면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권리를 향유함과 아울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민주시민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형성됨<sup>4)</sup>.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역량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것임.

4)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미국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찰스 쿨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 독일 튀빙엔대학 정치학과 한스 게오르그 벨링 명예교수



### 3. 기본원칙<sup>5)</sup>

#### 가. 정치적 중립성

- 민주시민교육은 비정파적·초당적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함.
- 정권교체마다 교육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나. 민주성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함.
- 모든 과정은 민주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견해가 서로 존중되고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

#### 다. 참여성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원되고, 강제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서는 안됨.
- 민주시민교육은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사회참여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함.

#### 라. 보충성<sup>6)</sup>

- 민주시민교육의 업무관할권과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원칙임.
- 상위단위의 권한은 하위단위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일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경우 재정지원이란 보충적 기능만 수행해야 함.

5) 한국정치학회,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모색, 2009, 56-58쪽 참조

6) '보충성'이란 '더 큰 단위는 그것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가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는 기능만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함. 이는 중앙단위의 권한은 재정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실제 시민교육은 지역의 하부단위나 관련단체에서 담당해야 하는 원칙을 말함.

## 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가. 주권의식(민주시민의식) 함양

‘주권의 의미와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선거와 민주주의’ 등이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주요 학습내용이며, 개별 과목으로 ① ‘주권’과 관련하여 「국민주권론」, 「참정권의 확대」, 「투표의 효용성」 등, ②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철학과 사상」,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등, ③ ‘민주시민의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 등, ④ ‘선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나.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 참여

‘선거·정치제도의 이해’, ‘선거·정치참여의 필요성’, ‘정당·후보자의 합리적 선택 방안’, ‘정책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주사회의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과목으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선거절차」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다. 체계적·지속적 학습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성하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학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2.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 가. 닫힌 모형

‘내용전달’의 중심의 수업 방법(가르치기)으로 수직적 방식(강의식)의 교수법을 말하며, 학습과정은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제시·전달·이야기·강의·시범·설명 등으로 이루어짐.

### 나. 열린 모형

‘문제해결’의 중심의 수업으로 수평적 방식(참여식)의 교수법을 말하며, 학습과정은 참가자의 자유학습·체험활동·경험 및 발표, 본보기(사례)학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됨.

### 다.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방법

- 선거연수원에서는 ‘열린모형’을 중심으로 ‘닫힌모형’을 가미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제시된 학습주제에 대해 자기인식 또는 자기계몽이 필요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자유학습·체험 및 경험활동, 본보기(사례)학습이 중요시 됨.
- 민주시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부응하여 행동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대화, 토론, 역할게임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식의 교수방법이 필요함.

### III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 1. 미국

- 미국은 독립 이후 다양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의 양성과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문화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연방이나 주(州)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시민교육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개발한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지침서’<sup>7)</sup>와 ‘국가교육향상평가서’가 시민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음.

#### 2. 영국

- 영국은 오랜 정치적 발전과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특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도 민주적인 태도와 생활양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시민의 관습과 규범으로 정착되었음.

7) ‘국가표준지침서’는 시민적 자질로서 5가지를 규정함.

- ①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이 되는 것
- ② 시민이 개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
- ③ 개인적 가치와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것
- ④ 사려깊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민문제 내지 공공문제에 참여하는 것
- ⑤ 입헌민주주의의 건전한 기능을 촉진하는 것

- 1980년대 후반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의 소외감과 독립의식 등에 따라 영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결속력의 약화, 범죄율의 증가, 공중도덕의 파괴 등 준법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 이른바 ‘영국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시민교육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민성 교육이 시작됨.
- 1988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하원에 ‘시민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교과과정지침 8호: 시민성 교육8)’을 수립하여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함.

### 3. 프랑스

- 프랑스는 국립교육 체계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박애정신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것임.
- 1960년대에는 68운동9)의 영향으로 시민교육이 국가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공교육 체계에서 사라졌으나, 1990년대에 다시 정치참여 분야를 공교육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함.

8) ‘교과과정지침 8호: 시민성 교육에서 시민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8가지를 제시함.

① 공동체의 본질, ②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 ③ 시민이 되기 위한 권리, 의무, 책임, ④ 가족, ⑤ 민주주의의 실행, ⑥ 시민과 법, ⑦ 일, 취업 및 여가선용, ⑧ 공공봉사

-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함.

① 토론능력 및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② 선거참여 능력, ③ 책임능력, ④ 협동능력, ⑤ 팀원으로서의 역할 능력, ⑥ 옳지 않은 일에 대응하는 능력, ⑦ 사회참여능력 및 갈등해소능력, ⑧ 반대의견 조정능력

9)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대학생과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벌인 대규모의 사회변혁운동. 이 혁명으로 드골정권이 붕괴되고, 서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반전운동으로 변질.

## 4. 독일

- 1945년 전쟁 종료 후 연합국의 4D정책<sup>10)</sup> 일환으로 진행된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주도 하에 계획적·체계적·전면적으로 진행되었고, 민주주의 고도화와 경제발전, 통일 후의 민주시민 육성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함.
-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원**<sup>11)</sup>과 주(州)정치교육원과 같은 초당적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연방예산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교수법 개발, 토론문화 형성, 정치적 의사 집약 방법 등을 학교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며, 정당관련 재단<sup>12)</sup>,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치교육을 실시함.
- 1960년대에 정치교육의 방법론으로 정치교수학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정치교육이 정치적 갈등과 논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1976년에 최소한의 원칙을 합의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sup>13)</sup>을 도출하였으며, 이 협약은 독일 정치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됨.
- 1989년 독일 통일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반인류적 가치를 배척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의 목적 아래 민주시민 육성과 정치적 비판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함.

10) ‘4D정책’은 전후 전쟁재발 방지책으로 포츠담회담에서 연합국 측이 독일에 제안한 반나치화, 비산업화, 비군사화, 반종양집권화 정책을 말함.

1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연방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국의 감독을 받으며, 12명의 학자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에서 교육활동의 질과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12) 독일의 정당들은 정당법상의 정치교육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산하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사민당: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자민당: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기민당: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 기사연: 한스 자이델재단
- 녹색당: 하인리히 뵐재단

13)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3가지 원칙

- ①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② **논쟁의 투명성**: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 ③ **학습자 지향성**: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일본

-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천황중심의 국가주의적인 수신(修身)교육을 폐지하고, 문부성에 '시민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기본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공민적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공민교육을 실시함.
- 지역사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시정촌(市政村)' 단위로 공민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을 전파하고 각종 공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고 있음.

## IV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 1. 개관

#### 가. 사업취지

- 단기적으로는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및 연수를 확대하여 선거·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선거·정치 참여를 제고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sup>14)</sup>.

#### ▷ 법적 근거 ◁

##### ※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4조(선거제도)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 나. 추진경과

- 1996년 선거연수원을 개원,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하였고,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대학생·시민단체 회원 연수, 선거법 공개강좌,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함.

14) 2014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발표된 '2013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평균 8.06을 얻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21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full democracies)에 포함되었음. 민주주의 지수 평가항목 중 선거과정(9.17)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참여(7.2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2000년 정치교육과를 신설**, 전담부서 마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정당간부 연수, 시민단체간부 연수, 언론사 기자 연수, 강사양성과정 운영, 미래유권자 대상 현장체험과 퀴즈,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을 실시함.
- **2006년 시민교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교육분야를 선거관계자 연수, 여론형성층 연수, 교원 및 대학생 연수, 일반유권자 연수, 미래유권자 연수,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등 크게 6개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열린 학습서비스 제공,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웹진 발행, 관학협동 과정으로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등을 실시함.
- **2011년 민주시민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선거연수원만으로는 학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였고, 초·중등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시·도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함.
- **2013년 시민교육부로 부서명칭을 개편**,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강연콘테스트'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라는 타이틀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운영하는 한편,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한 정당사무처 간부 및 일반당원 연수, 성인지(性認知)예산 확보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 연수, 전국단위 선거 시 선거법 안내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선거아카데미',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등 다양하고 유익한 유권자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2. 민주시민교육 현황

### 가.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 ○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당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선진 선거·정치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각 정당의 사무처 간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경우 연 4회, 그 밖의 정당의 경우 연 1회에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0명).

#### ○ 당원 연수

정당발전을 위한 당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각 정당의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014년 경우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150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5,000명).

#### ○ 선거아카데미

정치관계법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 선거 시 52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00명).

[선거·정당 관계자 연수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정)		비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정당사무처간부연수	6	491	6	297	8	1,292	9	1,312	10	1,000	외부 연수시설 활용
당원 연수	38	6,139	71	6,895	50	6,968	489	40,804	150	15,000	정당 자율 운영
선거아카데미	50	17,460	-	-	28	3,767	-	-	52	9,373	입후보관계자 대상



## 나. 일반유권자 연수

### ○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학습과 현장견학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도 단위로 매년 16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700명).

### ○ 교원 연수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 능력을 제고하고,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 진행하며 시·도 단위로 매년 16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700명).

### ○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

‘다문화가족 연수’ 및 ‘북한 이탈주민 연수’가 해당되며 주권의식 함양 및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적응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214개 다문화가족센터(6,000명)와 북한이탈 주민·청소년(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 ○ 여성정치참여 연수(성인지 예산사업)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여성 중심의 연수이며, 여성유권자, 여성 단체회원,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과 시·도에서 20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4,000명).

[일반유권자 연수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정)		비 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14	518	19	680	16	621	21	1,343	16	640	정외과 학생 등
교원 직무 연수	9	264	21	594	17	503	15	451	16	640	초·중등 교사
다문화가족 연수	1	40	124	3,667	292	8,678	78	2,835	200	6,000	외부강사 출강
북한이탈주민 연수	21	1,560	17	1,081	39	2,162	26	1,895	15	1,000	하나원 출강
여성 정치참여 연수	-	-	-	-	-	-	-	-	20	4,000	성인지 사업

## 다. 미래유권자 연수

### ○ 청소년리더 연수

미래유권자의 건전한 선거·정치 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직접 출강 방법으로 매년 1,000회(구·시·군별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40,000명).

### ○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선거절차 체험학습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체득하고 미래 국가·사회의 건전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명).

### ○ 새내기유권자 연수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선거·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능 종료 이후 각 학교에 출강하는 방법으로 매년 300회(구·시·군별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

[미래유권자 연수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정)		비 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청소년리더 연수	934	55,677	1,474	87,751	994	51,287	1,068	51,895	1,000	40,000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1	93	1	96	1	96	1	100	1	100	
새내기유권자 연수	-	-	-	-	-	-	332	63,580	300	30,000	

## 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 민주시민리더 양성과정

선거·정치 문화를 견인하는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계 지도층 인사, 정치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음(1회 과정 40명).

### ○ 강연콘테스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선거·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대회를 펼치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날(5월10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초 개최함.

### ○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의 역량을 갖춘 선관위 직원 및 일반인을 선발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명).

### ○ 관학협력사업

정치관계법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강좌 개설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6개 대학과 지원 협력을 맺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예정)	비 고
민주시민리더 양성 (민주정치아카데미)	-	· 상반기(1기) 35명 · 하반기(2기) 40명	· 상반기(3기) 40명 · 하반기(4기) 40명	
강 연 콘 테 스톱	· 청소년부 63팀 접수 · 일반부 98팀 접수	· 청소년부 30팀 접수 · 일반부 70팀 접수	· 청소년부 30팀 접수 · 일반부 71팀 접수	청소년부, 일반부 각 10팀 결선진출
강 사 양 성 과 정	· 내부 : 18명 · 외부 : 31명	· 내부 : 114명 · 외부 : 56명	· 내부 : 30명 · 외부 : 30명	
정 치 관 계 법 개 설 대 학 지 원	· 6개 대학	· 7개 대학	· 연수원: 7개 대학 · 시·도: 9개 대학	

### 3. 향후 과제

#### 가. (기본 틀)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1)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합의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 후 대외에 천명하여 큰 틀에서 방향성 및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야 함.
  - ☞ 기본원칙으로는 ①정치적 중립성, ②민주성, ③참여성, ④보충성의 원칙 등 4대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2) 민주시민교육의 공정한 추진체계 확립

-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청사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일반유권자 및 미래유권자 연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사후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업의 정당성 및 체계성을 확보해야 함.
  - ☞ 심의기구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하되, 그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12명)의 역할 강화함.

##### (3) 민주시민교육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민주시민교육 기관·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지식과 정보들이 많이 축적된 반면, 상호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저조한 실정임.

-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음에 터잡아 민주시민교육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학계·시민단체 등과의 교육네트워크 구축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역 차원에서도 시·도단위와 구·시·군단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4) 민주시민의식 함양 정책의 법제화 추진

- 2013년도에 추진하였던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법제화를 재추진해야 함.
- 선거연수원이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통하여 관련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함.

### 나. (교육과정) 국민과 공감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1)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 (초등) 청소년리더과정 → (중등) 미래지도자과정 → (청년) 대학생 정치캠프 및 차세대리더과정 → (중장년) 민주시민리더과정 운영
- 평생교육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강구(‘풀뿌리 민주주의’ 운영·지원등)해야 함.

## (2) 국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선도적 활용

- 정당이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국민소통 정치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 ☞ 스웨덴이 매년 7월초에 알메달렌 공원에서 개최하는 정치박람회 벤치마킹
- 유권자의 주권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콘테스트'를 확대·운영하며,
- 정치·사회 리더 양성과정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 (3)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

- 정당 사무처 간부 및 당원연수의 자율적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 선거·정치분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확대하며,
-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관학협력 사업으로 대학교의 정치관계법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함.

## (4) 초·중등학생 민주시민 역량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 청소년 시기의 교육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고하여,
- 초등학생 대상 「모의선거 교실」, 「민주주의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선거캠프'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초·중등학교 교육교재 및 부교재(텍스트, PPT, 동영상 등)를 개발·보급에 주력해야 함.



## 다. (교육내용) 교육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전문가 양성·관리

### (1) 민주시민교육 실태 조사·분석(외부전문가 활용)

- 평생교육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 통일대비 남·북한 민주시민교육 실시방안 연구해야 함.

### (2) 교육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교재 심의기구 운영으로 콘텐츠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기본콘텐츠' 제작·보급하고,
- 개별 분야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해야 함.

### (3) 교육전문가 확충 및 체계적 관리

- 각급 학교 교사, 시민·사회단체 리더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단을 편성·운영하고,
- 민주시민교육 교수요원에 대한 인적사항, 전문분야, 연구·강의실적 등을 분석하여 DB화를 추진해야 함.





##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

---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

발행 \_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0(인의동 48-25)

전화 \_ (02) 764-0213

인쇄 \_ 성문기획(02-2272-1977)

---

〈비매품〉